일반논문

생태담론의 지역화와 지역담론의 생태화

Localization of ecological discourses and Ecologization of local discourses

이상헌* · 정태석**

이 글은 현대사회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이 가지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위기는 현대성의 다양한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결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경제성장중심적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적 사회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과정과 분배관계에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적 실천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느라 파편화된 삶을 넘어서 생태주의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이고 공공적이며 생태친화적인 삶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지역은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해보면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거점으로서 지역이라는 '가능성'은 사실상 막혀있다. 끊임없이 토건지향적 개발과 성장주의에 지역의 담론이 포획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생태주의적 전환의 가능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건지향적 지역담론을 생태화해야 하며, 실천적인 생태화 전략으로서 소비자인 노동자들이 결사체를 구성하여 이들이 초국가적으로 연대하는 운동 방법이 개인차원에서, 공공영역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생태주의적 전환, 생태사회주의, 상처입은 지역주의, 생태화, 결사체 민주주의

*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조교수(제1저자, ttochi65@hs.ac.kr)

**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부교수(교신저자, tsjeong@jbnu.ac.kr)

www.kci.go.kr

1. 지구환경위기와 생태주의적 전환

오늘날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면서 점차 지구온난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대기권의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켰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가뭄, 홍수, 생태계변화 등으로 다양한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적인 상식이 되었다. 이처럼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구적 환경문제들이 지구에서의 인간의 존속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해 지면서 생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하여 지구적 생태환경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공동행동에 선진국들도 점차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의 위기를 낳는 상징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인간사회가 그동안 산업화와 편리한 삶을 위해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금속을 포함하는 산업쓰레기와 공장폐수 등의 배출은 우리 주변의 대기, 강, 바다, 땅을 오염시켜 신체의 건강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적 삶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자연의 위협에 대처하고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싸워온 결과로 과학기술과 산업을 발달시켜 물질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이제 물질적 진보가 환경파괴와 생태위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또 다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생태위기에 대한 반성은 현대성(Modernity)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든스(A. Giddens)와 벡(U. Beck)이 대표적이다. 기든스는 현대성의 제도적 차원들을 자본주의, 산업주의, 행정적 집중화(감시장치), 폭력수단에 대한 통제(군사력) 등 네 가지로 나누면서, 각각 경제성장 메커니즘의 붕

www.kci.go.kr

괴, 생태학적 붕괴와 재앙, 전체주의 권력의 성장, 핵전쟁과 대규모 전쟁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Giddens, 1990). 벡은 국민국가, 군국주의, 과학, 진보, 경제성장, 완전고용, 계급, 거대정당들과 좌우연합, 사회복지, 가족, 성역할 등 산업사회가 의존했던 현대성의 원리들이 산업사회 발달의 결과로 나타난 지구화, 생태위기, 경제위기, 과학기술의 위험, 불완전 고용체계, 개인화 등 반현대성의 원리들과 대면하게 되면서 위험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산업 현대가 자신의 발전의 결과와 자기대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귀적 현대화'라고 부르며, '하부정치' 또는 '풀뿌리정치'를 통한 '정치적인 것'의 재발견이 요구되는 현대화라고 말한다(Beck, 1997; 정태석, 2007: 297~300).

현대성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생태위기는 현대성의 다양한 원리들이 체계적이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적, 성장중심적 사회경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혁과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과거의 인식 및 가치 패러다임의 근원적 반성을 통한 생태주의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태주의 패러다임 또는 녹색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생태위기와 환경파괴의 경향을 심화시켜 온 산업주의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소비주의의 가치, 국가 중심적 사고, 위계적, 권위주의적, 호전적 사고, 자본주의의 시장중심적, 이윤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탈물질주의적, 생태친화적, 절약적 가치, 탈국가적, 시민사회 중심적, 지역 중심적 사고, 수평적, 탈권위주의적, 평화주의적 사고, 탈시장적, 탈이윤적 사고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생태주의 또는 녹색을 단순히 생태환경적 차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생태, 생명, 평화, 정의,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의적 차원으로 확산시켜 하나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생태주의적 전환'은 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해 과거의 이론적, 실천적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통해 대안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www.kci.go.kr

그런데 이러한 '생태주의적 전환'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이론적 전략과 새로운 대안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생태담론들을 재검토하면서 보다 심화된 질문들, 문제제기들, 제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사회의 전망을 위한 생산적인 논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지구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해 역설적으로 지역이 가지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지역(담론)의 특수한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생태적 관점에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시론적이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생태 담론과 지역, 생태주의적 전환

1) 생태담론의 쟁점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지구적인 생태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구의 다양한 생태 담론들, 생태주의 이론들을 소개하는 등 이론적 대응들이 생겨났고, 규범적, 실천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담론적 논쟁들이 이루어져왔다. 1987년 민주항쟁과 정치적 자유화 이후 사회적 관심들이 점점 더 다양화되기 시작했고,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면서 1990년을 전후해서부터는 선진국의 생태주의 이론들에 대한 번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알트파터(E. Altvater), 오코너(J. O'Conner), 페퍼(D. Pepper), 돕슨(A. Dobson) 등의 책들이 번역되었고, 생태주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비판적으로 소개한 문순홍의 책『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1992)도 출간되었다. 한편 정태석은「환경사상의 몇 가지 쟁점」

www.kci.go.kr

에서 당시 국내외 생태환경 이론의 쟁점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소개하였는데,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대 성장의 한계', '산업주의 대 자본주의', '생태주의 대 사회주의', '환경 대 계급', '노동운동 대 환경운동(신사회운동)'의 쟁점들을 다룬 바 있다(정태석, 1994).

1990년대 이후 생태환경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은 각종 대형 환경오염 사건들의 발생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의식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왔는데, 실천적 관심에서 생태학을 정치적 차원에서 이론화하려는 시도들과 지역에서 생태주의의 실천적 기반을 형성하려는 논의들이 이어져왔다(문순홍, 2006).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과학≫ 2008년 겨울호 특집에서 생태주의와 맑스주의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시도들, 생태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면서 생태주의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생태환경에 관한 이론(담론)은 대체로 환경관리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생태주의, 근본생태주의, 좌파환경(관리)주의, 생태맑스주의, 생태사회주의 등으로 나뉜다(Dobson, 1993; 문순홍, 1992; 구도완, 1996; 정태석, 1994). 이러한 분류는 크게 두 가지 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축은 현대사회가 산업(공업)적 생산방식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해온 과정에서 생겨난 생태환경 위기에 대해 얼마나 근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환경관리주의는 생태환경 위기를 인류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기보다는 부차적인 것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로 본다. 반면에 근본생태주의는 인간중심적인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면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멈추고 인간이 생태계의 자연적 순환의 일부로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성장주의의 편에서 성장과 생태환경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사회생태주의는 생태주의의 편에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자연중심주의, 근본주의를 벗어나려는 입장을 보여준다.

www.kci.go.kr

다른 하나의 축은 환경과 분배, 환경과 계급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좌파환경관리주의는 환경관리주의와 유사하게 생태위기 또는 환경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또는 생산방식의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서 생산력주의, 성장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분배적 불평등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이 생산력 발전이나 성장의 중단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생태사회주의는 성장주의에 반대하며 패러다임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추구하는 생태주의에 동조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반위계적인 생태(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분배적 평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배적 평등의 실현이 자본주의적 욕망의 확산을 제한하면서 자원 및 에너지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발생을 줄여 생태적,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대안적 사회를 추구하는 실천적 세력으로서의 친환경집단과 노동계급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좌파환경관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급은 성장주의와 모순적이지 않은 친환경적인 기술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노동계급은 별다른 저항감 없이 친환경집단이 될 수 있다. 친환경기술에 기초한 생산력 발전 및 성장과 생태위기의 극복이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면, 이제 계급적 불평등이 사라지는 사회주의 사회는 그 자체로 친환경적인 사회가 된다. 반면에 생태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급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본의 성장주의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고 역으로 친환경집단은 생태적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분배적 평등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집단, 생태주의 세력은 평등주의적 전환을 위한, 노동계급은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자기혁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환경운동과 평등적 가치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연대를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가 생태주의적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생산력주의, 성장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추구할 수 없으며, 분배적 평등이 물질적 절약과 친환경적 삶을 이끌어내는 기초가 될 때

www.kci.go.kr

생태주의와 사회주의의 바람직한 결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생태맑스주의와 생태사회주의: 맑스의 생태학적 재해석의 한계

앞서 살펴본 '성장 대 환경', '환경 대 분배(계급)'라는 두 축을 교차시킬 본다면, 생태맑스주의와 생태사회주의는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생산력주의, 성장주의에 비판적이면서도 분배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와 생태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맑스의 자본주의 이론이 지니는 설명적 적합성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론적 입장에 따른 실천적 대안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생태맑스주의가 생태위기를 설명하는 데 맑스의 자본주의 이론의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생태사회주의는 그 한계에 보다 주목한다. 생태맑스주의는 일반적으로 '맑스의 생태학적 재해석'을 추구하는 이론적 경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최근의 글에서 심광현(2008)은 복잡계 과학의 관점에서 맑스의 생태학적 재해석의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맑스가 『자본론』을 통해 제시한 '정치경제학 비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M-C-M'>의 순환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면서 더 많은 화폐의 축적을 위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게 하는 강제적인 노동과정에서 자연 자원과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소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 그 결과 살아 있는 자연과 노동은 거대한 생산수단(죽은 노동)으로 집적되어 자본의 권력으로 전화되고, 자연과 노동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 을 체계적으로 해명했다는 데에 있다(심광현, 2008: 69).

심광현은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계의 극복은 임금, 산업 이윤, 상업 이윤, 금융 이윤, 주주 이윤, 지대,

www.kci.go.kr

세금 등 여러 분배항들 간의 비율을 바꾸는 하위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축적된 자본/상품이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를 소외되지 않은 합리적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전체 체계의 구조와 성격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체 역능을 다차원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와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자연 자원의 생산과정으로의 투입은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심광현, 2008: 74~78).

확실히 자본주의적 분배가 기본적으로 생산된 전체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런 점에서 분배체계의 조정만으로는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분배체계의 조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의 지적도 정당하다. 비록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의 작동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생산수단(자본)의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한 착취의 폐지라는 주장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의 소외되지 않은 신진대사 또는 신진대사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심광현이 주장하듯이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에 대한 착취와 자연의 파괴는 동일한 과정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점, 즉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가치 및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인 동시에 신진대사의 균열과정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심광현, 2008: 93), 착취의 폐지가 반드시 신진대사의 균형을 지향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가 자본주의 체계에서의 자연 파괴를 문제삼기 위해 잉여가치 착취에 대한 비판에 더하여 소외에 대한 비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 그는 뿌리를 밝히는 일과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가 심화시킨 노동중독과 소비중독에 매몰되어 있는 대중들이 어떻게 새로운 생태학적 주체로 거듭날 것인가

www.kci.go.kr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2008: 94~95). 게다가 그의 작업이 자연 파괴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착취의 과정인 동시에 자연 파괴의 과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착취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기인하는 문제라면 자연 파괴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기인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양면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른 착취와 분배의 부정의를 낳는데, 여기서 생산력의 증대나 소비의 확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산업적 생산의 확대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의 소비 증가와 자연 파괴를 낳으며, 여기서 생산력의 증대나 소비의 확대는 생태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물론 여기서 착취(생산)의 증대를 통한 이윤(소비) 확대의 논리는 산업적 생산방식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자연 파괴 경향을 가속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위기와 자연 파괴에 대한 맑스주의적 논리는 설명적 타당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생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명하는 내적 논리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맑스주의적 논리는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 즉 현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생태위기와 자연 파괴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공장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의 발생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치의 순환 과정이 아닌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재생산 과정으로서의 소비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은 어떻게 도출될 수 있으며, 여기서 노동운동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따라서 비록 자본주의가 착취와 자연 파괴를 동시적으로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포함하는 산업적 생산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생태주의는 서로 다른 관심에서 출발하며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생태사회주의

www.kci.go.kr

가 생태주의 가치와 사회주의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양자의 수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생태맑스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생태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생태친화적 대안사회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원론적이거나 생산중심적인 생태맑스주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생산방식과 소비양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생태정치와 생태주의적 전환의 거점으로서의 지역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생태환경에 관한 이론(담론)들은 경제성장과 생태환경 보호에 관한 입장과 물질적 분배에 관한 입장이 서로 교차되면서 생태위기와 환경오염의 원인분석과 설명논리, 실천주체와 실천방안,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 이론(담론)들의 이론적 관점의 차이는 실천적 입장의 차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론적, 실천적 헤게모니 투쟁의 조건이자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 이론(담론)들의 실천적, 정치적 성격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문순홍, 2006).

역사적으로 생태학적 이론과 실천을 둘러싼 정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환경문제, 생태위기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경운동들이 이루어져 왔고, 국가 또는 제도정치에서는 환경운동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급격히 분출하면서 이전에 적극적인 쟁점이 되지 못했던 환경문제가 기존의 제도정치로 수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생태주의를 정치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녹색당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환경운동이 자본, 기업의 환경파괴에 저항하게 되고 국가가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되면서, 자본과 기업이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생태친화적 기술들을 도입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오늘날 생태정치는 국가의 제도정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시장 등 다양한 영역

www.kci.go.kr

에서의 일상생활의 정치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들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정치는 국가, 시민사회, 자본주의 시장의 상호관계 속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영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친화적 실천들은 서로 불균등하게 발전하면서 복합적인 적대와 갈등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가능성과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 시장은 앞서 보았듯이 자본, 기업의 이윤극대화 논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주의적 전환에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광고를 통한 욕망의 확대재생산을 지속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시키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증대시킨다. 자본이 지향하고 또 부추기는 성장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는 노동계급조차도 임금과 소득의 증대를 위해 이들에 동조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은 스스로 생태주의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공간이 되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시장이 생태주의적 전환의 공간이 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국가이다. 실제로 국가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정해진 환경 기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녹색화는 가능한 대안들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주의적 대안도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 역시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자본가계급과 연합하는 경향이 강하여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와 성장주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는 손쉬운 대중적 지지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성장주의에 의존하며 성장을 통해 국가의 성취를 과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과학기술관료주의에 의존하게 되며, 이로 인해 관료 조직, 전문가 조직의 자기재생산 요구와 단절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국가관료와 전문가집단과 자본가계급의 성장주의 연합은 쉽게 해체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경우, 개발독재 시기에 소위 보

www.kci.go.kr

릿고개를 극복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성장주의 신화가 대중적인 사고틀이자 일상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므로 국가는 생태환경의 개선을 통한 대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녹색화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물질적 풍요를 통해 대중을 포섭하기 위해 성장주의 자체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끊임없이 동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과 국가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한 생태주의적 또는 생태사회주의적 전환 전략은 중앙집중적, 거시적 전략으로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과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실천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거시적 변화를 위한 실천주체를 형성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불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적이고 공동체적인 생산과 소비의 순환단위가 보다 생태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생태사회주의가 맑스주의적인 사회주의 전통보다 공동체주의적, 분권적,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 전통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정태석, 1994).

현실적으로 생태주의적 실천주체들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성장주의, 소비주의와 단절할 수 있는 생활양식의 전환 가능성을 찾고 지역들의 수평적인 반성장주의, 생태주의 연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중앙집중적, 거시적 자본주의 시장체계와 성장주의 국가의 근본적 변혁을 이루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과 기업의 상품화를 통한 자연파괴의 경향을 억누르면서 국가의 성장주의적 경향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생태친화적 집단들이 소비자운동, 환경운동을 통해 자본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및 저항에 나서는 등 시민사회의 일상적 생태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장과 환경이라는 이중적 가치 속에서 많은 시민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견고한 성장주의 연합과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해체시키고 의식과 가치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상적 경험을 통한 사고의 전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www.kci.go.kr

물론 한편으로는 최근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와 분배 없는 자본주의적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대중적으로 각인된 것이 긍정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을 시민들의 일상적인 하비투스(habitus)로 만들어내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생태친화적 경험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생태친화적 경험과 실천은 한편으로는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녹색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을 형성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와의 단절을 위한 거점을 형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순환 속에서 생태친화적 전환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보다도 생산 영역이다. 그런데 생산 영역을 지배하는 것은 자본이며, 자본은 기본적으로 생태환경을 위해 이윤을 희생시키려하지 않는다. 노동자 역시 생산에 참여하지만 이윤증대를 통한 임금의 상승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충분히 녹색화되어 자본의 이윤논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생산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국 전환을 위한 대안적 가능성은 소비와 일상생활 영역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은 단지 공장에서의 생산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공간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파괴적인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사용, 소비 등 일상적인 생활양식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소비는 시민들의 건강, 안전 등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상생활과 소비의 영역은 자본의 이윤논리에 저항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자본의 상품생산과 욕망/소비의 순환적 확대재생산 고리가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자본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발전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식과 가치의 생태주의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www.kci.go.kr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운동이 소비 영역에서의 저항에 머무른다면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 소비자운동이 자본의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환경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시장체계 자체의 변혁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합리화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려면 생산과정과 분배관계에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적 실천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넘어서는 또는 벗어나는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순환 과정을 만들어내는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경제활동과 결합하는 소비자운동,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그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생태위기에 대한 거시적 인식은 지역에서의 일상적 경험과 사회적 교류를 통한 생태친화적 인식과 실천적 삶으로 이어지고 소비 영역에서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생산 영역에서의 전환으로 확산시켜나갈 때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잠재력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쟁사회에서 주택, 부동산, 교육 등 개인주의적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파편화된 삶을 넘어서 생태주의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이고 공공적이며 생태친화적인 삶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 터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은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생태정치, 녹색정치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자하는 대안적 정치 혹은 풀뿌리 정치로서 개인이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태담론은 생태정치의 실천 공간으로서 지역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지적이고 폐쇄적인 지역생태공동체 모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담론과 지역담론의 결합은 많은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매개를 필요로 하며, 양자는 지구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의 다층적인 공간적 규모에 걸쳐 복합적인 영

www.kci.go.kr

향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지구화된 세계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현실적 거점은 생산자-소비자-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의 네트워크가 확산되어 갈 때 비로소 지구적 수준에서의 생태주의적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태담론의 지역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생태담론의 지역적 전환이 필요하다면, 한국의 지역은 이러한 생태담론이 수용되기에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가? 압축적이고 국가주도적이며 대단히 토목개발사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발전과정을 경험한 한국에서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지역은 생태담론이 형성되고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인가? 이 지역에서는 어떤 담론이 지배적인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피력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공간인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역담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담론이 생태담론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지역담론의 생태화

1) 한국 지역담론의 형성과 특징: 상처 입은 지역주의

한국에서 수도권 혹은 중앙에 대비되는 지역으로서의 지방은 식민지와 다름없다(강준만, 2008).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인력 모든 것이 중앙에 종속적이며, 종속의 양태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즉,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발전의 원동력을 중앙으로부터의 교부금이나 각종 개발사업 그리고 인프라 건설 등에 의존해야 하며, 정치적인 자율성과 독립성 보다는 중앙과의 유착 정도에 의해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과 종속성이 지역의 저발전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

www.kci.go.kr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구조 속에서 경제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토건 개발 사업을 끊임없이 유치하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개발사업의 유치과정과 진행 과정에서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의 일부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저발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개발을 통한 성장의 신화 속에 함몰되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국가를 여러 사회 세력들 간의 투쟁과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Brenner(2004)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행위는 공간적 선택성(spatial selectivity)을 갖는다. 이것은 특정한 공간에 차별적인 우선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자본축적을 도모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결과 특정 지역이나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이해관계를 지키고 확대시키려는 '영역화의 정치(territorial politics)'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도시 혹은 지역들 간에 갈등과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영역적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정치적 동원 정도가 강하면 국가는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이른바 '토건지향성'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이다.

박배균(2009)에 의하면 한국이 토건지향성을 가진 국가가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중요했다고 한다. 첫째는 계급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균열구조, 특히 정당의 정치적 균열구조가 중요한 조건이었다. 둘째는 영역적 이해가 동원되는 공간적 스케일이 국가전체보다는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역이 처한 정치경제적 실재(reality)를 해석하는 담론 구조가 실상에 기초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프레임(frame) 속에서 현실을 해석하여 지역의 식민지화, 특히 맹목적인 성장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박배균, 2009: 70~72). 이 세 가지 조건 속에서 한국은 '토건지향적 발전주의 국가'가 형성되고 이후 '신자유주의적 토건국가'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1] 토건지향적 발전국

1) 신자유주의와 토건중심적 개발주의의 결합에 대해 조명래는 신개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개발주의에 대해서는 조명래(2006)를 참조할 것.

www.kci.go.kr

가가 형성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 외국 차관의 상당부분은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투자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담당하게 된 건설부처와 건설산업의 역할이 커졌고, 토건관료와 토건자본이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둘째, 국가의 공간적 선택성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장소기반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영역화의 정치가 등장하게 되고 지역개발 의존적 정치세력이 공고화되게 되었다. 크게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통해 토건지향적 발전주의 국가가 형성된 것이다(박배균, 2009: 73~78).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대외적으로 냉전의 붕괴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의 노동과 자본의 집약적 동원에 기초한 발전 국가 전략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즉,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한 민주화를 통해 억압적인 노동조절 체제는 유지되기 어려워졌고,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가에 대한 자본의 자율성도 커졌던 것이다. 국가 지배 엘리트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신자유주의적 조정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조정 과정에도 기존의 토건지향적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 "토건관료, 토건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국회의원, 언론, 지식인 등과 같이 국가, 지방적 차원에서 성장해온 토건이해집단과 그들 간의 동맹이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둘째, "1960년대 이래의 지속적인 토건지향적 개발과 그로 말미암은 부동산 치부가 신분상승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개인적 차원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투자 지상주의'와 같은 토건지향적 담론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면서 경쟁, 시장, 기업가주의라는 담론은 지배적인 담론이 되고 공익성 담론은 약화되었다(박배균, 2009: 81).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토건지향적 경로의존성은

www.kci.go.kr

지역의 헤게모니적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지역발전의 다양한 방식들 혹은 이에 대한 논의와 상상력을 철저하게 억압한다. 즉, 영역화된 정치에 기초한 지역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방식 이외의 다른 실험들이 모색되고 논의되고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강력한 연고주의(학벌, 혈연, 지연 등)에 의해 일종의 '후견주의(clientelism)'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토건적 개발사업에 대항하는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적 실험이 자유롭게 제출되고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한다.[2)]

이러한 지역의 담론 구조 속에서 형성된 지역주의는 토건지향적 국가에 의해 왜곡과 질곡이 일종의 상처로 남아있어서 건강하고 독자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또한 토건적 개발에 의해 환경파괴의 비용만 떠안고 개발의 편익은 중앙에 빼앗긴다는 점에서 '상처 입은 지역주의(wounded localism)'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3)] 즉, 중앙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불균형과 환경파괴를 계속 유지하는 토목공사중심, 개발일변도의 성장 담론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처 입은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지역담론은 지역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2) 토건지향적 지역담론에 대한 생태화 전략

(1) 생태화의 의미

위에서는 토건지향적 지역담론이 지배하는 '상처 입은 지역주의'가 형성되게 된 역사적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새만금 간척

2) 예컨대 지역개발사업 혹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매향노(賣鄕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구조인 것이다.

3) 이 용어는 한홍구의 박사학위논문(1999)에서 북한의 민족주의의 특징을 가리키면서 '상처 입은 민족주의(wounded nationalism)'라고 한 것을 차용해서 만든 용어이다.

www.kci.go.kr

사업,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 4대강 사업 등의 토건적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토건지향적이며 성장중심적 담론구조는 매우 강고하며, 이러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지역의, 그리고 국가의 생태적 발전 혹은 생태주의적 전환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상처입은 지역주의 담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에서는 토건사업을 통한 '성장 신화'에 중독된 상태를 해독할 수 있는 대항담론의 실마리를 브루노 라투어(Bruno Latour)의 '생태화(ecologization)' 논의가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라투어는 칸트(Kant)의 도덕에 대한 언명을 응용하여 자연을 수단으로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합목적성(finality)을 갖는 존재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칸트는 목적의 왕국의 범위를 인간에게만 한정하였지만, 라투어는 이를 비인간세계에까지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만일 코끼리, 사자, 나무, 곡물, 바다, 오존, 프랑크톤이 없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실재가 "목적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수단-목적 관계가 불확실해짐을 의미한다. 이제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매개자로서만 남게 된다"(Latour, 1998: 230~233). 따라서 예컨대 강이 운하가 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개발비용이 비싸고 쉽게 침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강이 자신의 합목적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수단으로만 간주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칸트가 말한 것처럼 "행위하는 주체의 의지에 기원을 둔 법칙"에 의거해서 강은 지류와 범람원을 거느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흘러야 하는 것이다.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원으로서만 취급하였는데, 자연을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근대화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라투어는 이러한 비판 전략을 '생태화(ecologization)'라고 불렀다.

"생태학은 자연의 이해나 목적을 고려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을 고려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질문이나 대상, 자료를 생태화한다는

www.kci.go.kr

것은 이것들을 생태계의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3세기에 걸쳐 진행되어온 근대화의 정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근대화된 곳을 생태화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생태학을 관계들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생각한다면 이 슬로건의 의미는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류투성이가 된다"(Latour, 1998: 235).

이처럼 자연을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목적과 수단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생태화 전략은 필연적으로 근대화 과정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게 된다. 즉, 한국처럼 근대화 과정에서 토건지향적 경로의존이 고착화된 것을 해독하기 위해 그동안 수단으로만 간주되었던 자연을 목적으로 간주하고 생태적 성찰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생태화 전략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며, 데카르트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난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주된 비판이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하지만, 생태화 전략에서 보여지는 존재론 혹은 윤리적 언명은 보다 좀 더 현실적인 차원으로 내려와야만 실천적 전략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2) 실천전략으로서의 생태화

근대화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생태화 전략을 실천적 차원에서 혹은 제

4) 근대 서구철학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동양적 사유의 한 사례는 원효대사가 주창한 '화쟁(和諍)사상'(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서로 대립되는 것을 각자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더 높은 단계로 통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을 의미한다)에 근거한 '불일불이론(不一不二論)'이다. 불일불이론은 개체의 속성을 개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다. 예컨대 열매와 씨는 별개의 개체이므로 하나라고 할 수는 없다(不一). 하지만 동시에 씨는 열매의 거의 모든 성질을 결정하고, 열매는 자신의 유전자를 씨에 남기기 때문에 양자가 둘이라고 할 수도 없다(不二). 존재의 이러한 불가분리성은 열매와 씨의 관계처럼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생명과 저 생명은 같지 않으므로 하나가 아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있어서 저 생명이 삶을 살고, 저 생명이 죽으면 이 생명도 영향을 받으며, 저것이 죽으면 이 생명도 죽는다"(이도흠, 2010).

www.kci.go.kr

도적 차원에서 실현(implementation)해보려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실질적이고 현저한 근대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민족국가(capitalist nation-state)'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자본, 민족이라고 하는 독립된 범주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결합하게 되었고, 특히 생태화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5)]

국가, 자본, 민족은 봉건시대에는 봉건국가(영토, 왕, 황제), (주로 상업)도시, 그리고 농업공동체로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서로 다른 교환의 원리에 기초해 있었다. 즉, 국가는 수탈과 재분배라는 교환의 원리에, 농업공동체는 자율적이며 상호부조적인 호혜적 교환의 원리에, 도시는 상호합의에 의한 화폐교환의 원리에 기초해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봉건체제를 붕괴시킨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침투였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절대주의 왕권국가에서는 봉건주의적인 경제외적 강제를 철폐하고 상인부르주아의 경제활동을 후원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세원(稅源)을 확보하였다. 또 화폐 공납제(貢納制)를 통해 농업 공동체에 상품경제를 강요하여 봉건적 경제를 부르주아적으로 재편하였다. 즉, 봉건지대가 국세가 되고 관료와 상비군은 국가 장치가 된 것이다. 국가와 자본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업공동체는 화폐경제의 침투와 함께 해체되는 동시에 그 공동성(상호부조, 호혜성)을 민족 안에 상상적으로 회복하였다. 이것은 민족이 농업공동체에서처럼 상호부조적인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사람들이 증여에 대해 부담감을 갖게 되는 일종의 교환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또한 민족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이러한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국가와 결혼하게 되는 것은 부르주아 혁명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것이 '자본주의적 민족 국가(capitalist-nation-state)'인 것이다(고진, 2009: 450~465).

5) 이하의 논의는 가라타니 고진(2009: 443~508)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필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작성하였다.

www.kci.go.kr

가라타니 고진(Garatani Kojin)이 자본, 민족, 국가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 자본주의적 민족 국가는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생긴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 대립을 국민으로서의 상호부조적인 감정에 의해 제거하고(예컨대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삼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이니까 지지해야 한다는 식),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함으로써 부를 재분배한다. 또한 자본의 외부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동력과 자연환경의 재생산도 민족국가가 개입하여 보장을 하거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한다(고진, 2009: 468). 예컨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혹은 탄소시장과 같은 시장메커니즘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쉽게 파괴하기가 어렵다.

설사 이 삼위일체적 결합 속에서 국가를 내부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상주의적이며, 다른 민족국가에 대해 패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삼위일체 중에서 한 부분인 자본주의만 타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결국 국가적인 관리를 강화하게 되거나 민족감정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기존 사회주의국가들의 국가자본주의적 행태나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의 문제가 그 예이다). 사실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앞 절의 생태담론에 대한 고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의 극복이 아니라 자본-국가-민족의 삼위일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세련된 최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진, 2009: 469). 따라서 생태화 전략을 실천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사회민주주의적 전략'(예컨대 생태복지국가)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의 무지막지한 토건국가보다는 나은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전망으로 삼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본-국가-민족의 삼위일체를 깨뜨리면서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화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할 것인가?

우선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문제점에만 골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본의 잉여가치 실현의 계기인 유통과 소비 부문까지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다. 자본의 '지구방화(glocalization)' 이후 선진

www.kci.go.kr

국의 경우 노동조합의 투쟁은 본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구조적으로 해외 식민지 혹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자면) 저발전국가에서 얻은 잉여가치를 분배해주도록 요구하는 일이 되어 버렸다. 결국 저발전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의 자본과 노동은 국제적으로 이해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비춰진다.[6] 또한 노동자들은 생산단계에서는 능동적 주체인 자본에 비해 늘 수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이처럼 지구방화된 경제 시스템 속에서 배타적인 민족국가에 포획되고, 생산단계에서도 수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 되는 노동자들이 생산단계에서의 파업이라든가, 공장점거를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전쟁에서 패배하여 국가와 자본의 운동이 마비된 경우)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고진, 2009: 475).[7]

하지만, 유통과 소비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맑스도 지적하듯이 상품은 바로 이 유통과 소비단계에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건 도약을 해야 한다. 이 도약의 성패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이다. 즉, 소비의 영역에서는 화폐를 가지고 상품을 구입하는 노동자가 소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8] 화폐경제에서 판매와 구매, 혹은 생산과 소비는 분리되어 있고, 이 분리는 노동자와 소비자를 분리시키며, 더 나아가 노동운동과 소비자운동을 분리시켜왔다(고진, 2009: 481). 그리고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환경보호나 소수자권익보호운동 등 일반 시민운동은

6) 동일한 착취구조가 국내의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7)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운동의 경제투쟁의 성과를 과소평가하자는 말은 아니다. 역사적 단계에서 이 투쟁은 노동조건개선,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등 분명한 의의와 성과가 있었고,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8) 금융자본화가 심화되는 단계에서 노동자들의 소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현란한 금융공학에 의한 파생상품이라는 것도, 결국 실물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채무이행능력 혹은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지불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자 급속하게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www.kci.go.kr

부르주아들의 운동이라고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결국 소비자가 노동자임을 감안해보면 소비자운동은 입장을 바꾼 노동운동이며, 노동운동은 소비자운동인 한에서 국지적인 한계(특정한 계급이익의 추구)를 넘어서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진, 2009: 481). 물론 이 소비의 주체를 자본-임노동관계와 분리시켜보면 대단히 추상적인 범주로 전락하고, 소비에 대한 욕망을 부추김 받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임노동 관계라는 맥락 속에 소비자를 위치시키고, 이들이 자본에 대항하는 운동을 하는 주체로 서게 되면 전혀 다른 지평이 나타나게 된다. 즉, 소비자로서 노동자들의 자본에 대한 저항운동은 그람시의 '진지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소비자운동이나 보이콧 운동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본의 잉여가치 실현의 계기에 소비자들이 직접 개입하는 창조적인 운동을 전개하자는 의미이다. 고진은 노동운동과 소비자 운동(시민운동)의 결합은 단순한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이 자체가 새로운 운동(초국가적인 소비자로서의 노동자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초국가적인 결사체주의자 운동(transnational associationist movement)"라고 이름 붙인다[9](고진, 209: 492). 이 운동은 자본주의의 M-C-M'의 회로 밖에 있는 생산과 소비의 형태(생산-소비협동조합)를 창조하는 운동이고, 윤리적 주체[10]가 성립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운동이다. 즉, 자본이 불러일으키는 착취, 소외, 불평등, 환경파괴, 여성차별 등에 대항하는 윤리적 주체들에 의한 도덕적 운동인 것이다. 고진은 이 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자본축적의 도구가 아닌 유통기능만 갖는 지역화폐가 시장적인 교환만을 촉진시키고, 노동자로서의 소비자가 자유롭고 주체적

9) 번역본에는 '어소시에이셔니스트'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으나 내용상 뒤에 논의하는 결사체 민주주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결사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10) 고진은 자본증식운동에 저항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 즉 칸트적 의미에서의 도덕적 차원의 운동이라고 본다. 이는 자본의 운동에 저항하는 윤리적 주체를 보편적인 윤리의 담지자로서 이해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ww.kci.go.kr

으로 형성되는 것을 도와주며, 비자본제적 생산-소비협동조합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본제 시장경제의 사멸이 시장경제의 사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국가의 사멸이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폭력적이고 패권적인 정치적 국가가 아닌 평화적이고 복지지향적인 사회적 국가 안에서 시장 경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사회적 국가 내에 일정한 중심을 두고[11] 여러 층위의 또, 여러 종류의 결사체들 간의 네트워킹하는 것 자체를 새로운 운동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고진, 2009: 494~504).

고진의 이러한 '초국가적 결사체주의자 운동'은 근대화의 대척점으로서 생태화 전략에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존재론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생태화의 윤리적 언명에도 부합하며(자본운동에 저항하는 윤리적 주체의 수립), 가장 현저한 근대적 제도인 '자본-민족-국가'의 삼위일체를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생태화의 본래적 의미를 잘 드러내는 운동방식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담론의 실천적 생태화

그러면 실천적인 생태화 전략에 의해 '상처 입은 지역주의' 담론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토건연합의 헤게모니 지배하에 놓여있는 지역담론 형성과정에 개입하려면 우선 산업사회적인 성장 중심주의에 저항하는 생태주의적 의제를 발굴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결사체들이 조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결사체들은 지역의 토건적 성장연합에 대항하여 상처 입은 지역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발굴하고, 형성하며, 확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11) 어소시에이션들이 파편화되고 고립화되면 자본-민족-국가에 의해 회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지역의 다양한 결사체들이 사회적 자본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을 때 협력 및 집합행동이 가능하며 시민적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진전 및 심화도 가능하고, 결국 지역과 국가의 생태주의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utnam, 1993, 2003). 즉,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결사체 민주주의적 실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사체민주주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시민결사체들의 미덕(virtue)을 강조하고 자발적 결사체들의 역할 중에서 특히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된 공적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단순한 정책적 효율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역할의 위임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를 '역능형성(empowerment)'하고 참여민주주의의 미덕을 살리는 것이 결사체민주주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김의영, 2005). 결사체민주주의의 민주주의적·공적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개인 차원, 공공영역 차원, 제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사체 민주주의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역할을 고려해본다면, 각 차원에서 실천적 생태화를 위한 결사체 민주주의적인 실험들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 실험들은 각 차원별로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겠지만 각 실험영역들이 중복될 수 있으며 서로 시너지(synergy)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본다.

<표 1> 결사체의 민주주의적·공적 역할

개인(individual) 차원	공공영역(public sphere) 차원	제도(institution)차원
효능감(efficiency)		대표
정보(information)	공공커뮤니케이션과 숙의(deliberation)	저항
정치적 능력(political skills)	차이(difference)의 대표	정책적위임(subsidiarity)
시민적 덕성(civic virtues)	공유(commonality)의 대표	조절과 협력
비판능력(critical skills)		민주적 정통성

출처: Warren(2001), 김의영·한주희(2008: 146)에서 재인용

www.kci.go.kr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는 생태적 덕성을 갖춘 윤리적 개인이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주로 결사체들에서 실시하는 생태교육이나 다양한 체험 학습에의 참여,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다른 지역 및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결사체들과의 교류 장려, 비도덕적 기업 상품 불매운동 등의 공동행동에 대한 참여, 도심농업 장려, 카세어링(car-sharing), 자아발견을 위한 명상,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 등이 한 예가 될 것이다.

공공영역 차원에서는 비자본주의적 방식의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유로운 숙의와 차이에 대한 관용을 확대시키는 실험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키울 수 있는 실험들이 중요한데, 앞서 고진이 언급했던 지역화폐도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광주나누리, 불교환경교육원의 두레, 대전한밭레츠의 두루, 송파자원봉사센터의 송파머니, 인천지역화폐 나눔, 관악지역화폐 나무, 그린네트워크 녹색화폐 사랑 등의 지역화폐 공동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김성균·구본영, 2009: 278). 지역화폐는 외국에서 수입되어온 것이긴 하지만 우리 전통의 품앗이 개념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핵심은 지역공동체성의 회복에 있다. 물론 지역화폐 운동이 절차상 매우 번거롭고,[12] 거래 요청과 제공의 수급이 불균형적이며, 생활 속의 진행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참여하는데 따른 접근의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인 관리 작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12) 예를 들어 광주나누리의 지역화폐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 → 나누리통장 지급 → 거래신청(제공 혹은 요청할 물품이나 서비스를 등록) → 거래확인(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한 확인) → 거래하기(상호간 연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짐) → 거래결과 보고(제공한 쪽이 전화로 거래 내역 통보) → 등록소에서 거래확인 → 계좌정리 및 공지(통장은 상호 간 서명을 통해 즉시 가입하며, 등록소는 홈페이지에서 계정 변경과 소식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김성균·구본영, 2009: 281).

www.kci.go.kr

동안 전담조직이 이 운동만 하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활동가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부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담 인력이 투입되어 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다른 지역화폐공동체와의 연대 및 교류 강화를 통해 일정한 운동의 구심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이외에도 숙의(deliberation)의 제도화 실험도 필요하다. 숙의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선호)를 조정, 성찰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이를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Dryzek, 2000). 결사체 민주주의적 실험의 하나로 간주되는 성미산 공동체의 경우에도 자발적이고 공동결정에 의거한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면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상호이해에 도달하며 커뮤니티 차원의 문제를 새로운 공동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의영·한주희, 2008: 157~159). 토건지향적 지역담론을 객관화시키고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숙의 과정을 지역정치과정에 제도화시킴으로써 생태적인 시각에서 지역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실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13]

제도적 차원에서는 그동안 국가가 담당했던 복지프로그램과 경제에 대한 조정기능을 결사체들의 민주적 관리체제가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 결사체 민주주의 논의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은 1980년대 영국의 생태사회주의자였던 마틴 라일(Martin Ryle)이 주장한 '기본소득 보장방안(guaranteed basic income scheme)'이었는데, 이후 울리히 벡에 의해 기본소득에 기반한 '시민노동' 개념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문순홍, 2006: 52~53). 벡에 의하면 "시민노동은 두 가지 노동유형들(임금노동, 자녀교육이나 자기발전을 위한 고유노동)

13) 물론 이 숙의 과정에 비인간 존재(non-human being)의 목소리는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의도적으로 이들 존재의 입장에서 문제를 조명하는 계기를 숙의과정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www.kci.go.kr

과 더불어 사회를 통합시키는 새로운 노동 유형이다. 이 시민노동은 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노동이 아닌 공적 노동으로 두 가지 원칙, 즉 자유의지 및 자기조직이라는 원칙과 공적인 재정동원이란 원칙에 터해 시민사회 내에 '제2의 행동섹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문순홍, 2006: 53에서 인용). 결국 복지나 경제 조정기능을 국가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민영화시켜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결사체들의 민주적 관리체제가 국가로부터 (공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가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지역의 실천을 위하여

생태위기는 현대성의 다양한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결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경제성장중심적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적 사회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과정과 분배관계에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적 실천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느라 파편화된 삶을 넘어서 생태주의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이고 공공적이며 생태친화적인 삶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지역은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해보면 생태주의적 전환을 위한 실천의 거점으로서 지역이라는 '가능성'은 사실상 막혀있다. 상처 입은 지역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토건지향적 개발과 성장주의에 포획되어있는 지역의 담론은 생태주의적 전환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생태주의적 전환의 가능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건지향적 지역담론을 생태화해야 하며, 실천적인

www.kci.go.kr

생태화 전략으로서 소비자인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들을 구성하고 초국가적으로 연대하는 운동 방법이 계속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생태주의적 결사체들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스토리를 서로 공유하며, 다양한 비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창조성으로 사회를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토건적개발 중심의 성장주의'라는 우상이 파괴되고 대안적인 행복과 만족의 경제가 자리 잡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Abstract

Localization of ecological discourses and Ecologization of local discourses

Lee, Sang-Hun & Jeong, Tae-Se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the local scale has possibility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of modern society or not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manner. The ecological crisis comes from the complicated implementation of various principles of modernity and, thus, it requires radical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and economic-growth-oriented social system.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alternative and practical strategies which can have influence 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should be suggested. In particular, to overcome the scattered life in pursuit of individual interest in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to attain ecological transformation, the base of daily life should be made. In this respect, local scale could be focus of ecological transformation. However, the local scale of Korea is far from the possible ecological transformation as it is surrounded by the discourses of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those discourses should be ecologized. To accomplish it, laborers as consumers should make multiple associations and connect themselves in the levels of individuals, public sphere, and institutions in the long run.

Keywords: ecological transformation, ecological socialism, wounded localism, ecologization, associative democracy

www.kci.go.kr

참고문헌

가라타니 고진 지음·송태욱 옮김. 2009.『트랜스크리틱-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 한길사.

강준만. 2008.『지방은 식민지다』. 개마고원.

구도완. 1996.『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김의영. 2005.「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433~455쪽.

김의영·한주희. 2008.「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험: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143~166쪽.

문순홍. 1992.『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_____. 2006.『정치생태학과 녹색국가』. 아르케.

박배균. 2009.「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공간과 사회≫, 통권 제31호, 49~87쪽.

심광현. 2008.「맑스주의와 생태주의의 그릇된 반목을 넘어: '생태학적 맑스'와 '세 가지 생태학'의 절합을 위하여」. ≪문화과학≫, 겨울호, 제56호, 64~97쪽.

정태석. 1994.「환경사상의 몇 가지 쟁점들」. ≪동향과 전망≫, 제23호, 151~174쪽.

_____. 2007.『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Altvater, E. 1991.「정치경제학의 생태학적 비판 서론 11개 테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전환기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

Beck, U., Mark Ritter(trans.). 1992. *Risk Society*. Sage Publication. 홍성태 역. 1997.『위험사회』. 새물결.

Dobson, A. 1990. *Green Political Thought*. Academic Division of Unwin Hyman Ltd. 정용화 역. 1993.『녹색정치사상』, 민음사.

Dryzek, J.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O'conner, J. 1991.「국제적 상호의존성과 생태학적 사회주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전환기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

Pepper, D. 1984.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Beckenham: Croom Helm. 이명우 외 역. 1989.『현대환경론』. 한길사.

논문접수일: 2010. 4. 16
논문수정일: 2010. 5. 7
게재확정일: 2010. 5. 14

www.kci.go.kr